

산업구조와 지역경제

(대전일보, 2003년 10월 14일, 22면 오피니언)

우리경제를 포함한 선진국 경제가 산업사회를 벗어나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진부한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 정도로 진전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실제 1950년대에만 해도 농업부문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게 차지했고, 제조업 부문은 11%수준에 불과하였다. 50년대부터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60~70년대에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는 본격적으로 성숙된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80년대 말에는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수산업 비중이 10%이하로 하락한 반면 제조업 비중은 32.1%로 상승하여 불과 30~40여년 만에 우리경제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 하였다.

국민경제에서 제조산업의 비중이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불과 1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경제는 또다시 사회 전분야의 정보화로 인하여 급격한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단적으로 과거 10여년간 국내 IT산업은 급성장하여 금년 1/4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15.5%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수출의 28.6%를 차지하게 되었다. 제조업부문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어선 것이 1964년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제조업기반의 산업사회로 진입한 이래 약 40여년 만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정보화 사회로 재차 빠르게 전환해 가고 있는 것이다. 어느새 IT부문이 전체경제 및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부문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01년 이후 이미 제조업부문에 있어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앞질러 국내제조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조업공동화는 일자리를 감소시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제조산업이 농촌의 유휴인력을 흡수한 것과 같이 제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을 IT산업에서 흡수해야 한다. 그러나, 두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질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산업간 노동력의 이전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IT산업은 지식과 기술집약적인 산업이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산업을 대신할 만큼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이 IT산업의 육성정책 못지 않게 강조되어야 한다. 이미 제조업부문의 임금수준이 여타 아시아 경쟁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조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전통제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 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전통적 제조업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똑 같은 문제를 미국은 이미 80~90년대에 직면 하였다.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3개년 프로젝트에 90년대 중반 펜실바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200만불을 투자하였다. 프로젝트는 가상기업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IT기술을 이용하여 핵심역량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한 네트워크에 속한 일부 기업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시장을 공략하는 협업모델을 개발하여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그러한 실험적 연구가 결실을 맺어 펜실바니아주 이외의 지역에 가상기업모델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다.

대전·충남은 여타 지역에 비하여 풍부하고 탄탄한 교육·연구기반을 갖추고 있어 그러한 모험적 투자를 시도해 보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와 같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협력을 얻어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해 본다.

ICU 경영학부 교수 權寧善 (경제학 박사)